

한·일 FTA에 대한 국내외 여건 평가와 협상에 대한 전망*

정인교 · 조정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원

< 목 차 >

- | | |
|-----------------------------|--------------------------|
| I. 서언 | V.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한·일 FTA |
| II. 한·일 FTA 협상 쟁점과 협상 중단 배경 | VI. 향후 한·일 FTA 협상 전망 |
| III. 한국의 FTA 추진실적 | 참고문헌 |
| IV.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최근 입장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한일FTA(KJFTA), 한미FTA (KORUS FTA), 협상(Negotiation), 지역주의(Regionalism)

국 문 요 약

2003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윈-윈(win-win) FTA’ 도출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협상이 결정되었고, 협상 기간 중 FTA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개시 1년만인 2004년 말 협상이 중단되었다. 독도문제, 교과서 파동 등 정치적 현안으로 양국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한국의 신뢰는 악화되었고 결국 양국간 FTA 협상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일본 정부는 한·일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국간 FTA 추진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2003-2004년 협상에서 입장 차이가 컸던 시장개방의 이익을 균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는 한·일 FTA 협상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EU와의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타결국면에 놓여 있어 ‘FTA로드맵’ 이행 순서로 보면 한·일 FTA를 검토해

* 본 논문은 필자들의 2008년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한·일 FTA 협상 재개 될 수 있나?”)를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NHA-JRI-2009).

야 하는 시기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으로 한일 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동아시아 내 위상 강화 및 경제통합 주도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신아시아 구상'이 아시아 모든 국가와의 FTA 추진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본의 한·일 FTA 공식협상 재개 제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한·일 FTA 협상 중단 배경을 고찰하고, 양국간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일 FTA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일 FTA 협상 전망 및 양국간 FTA 이익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 서 언

지난 몇 년 사이 동아시아 경제지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및 지역주의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동아시아에서도 FTA 지역주의 결성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¹⁾ 또한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추이를 이어가면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결, 동아시아 FTA 검토 제안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FTA 체결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중반부터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시작하였고, 2000년 들어 양국이 FTA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에 동아시아에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를 전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고,²⁾ 이후 중국 주도로 타결된 중·아세안 FTA는 2005년 이행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FTA 체결 경쟁이 시작되었고, 국제경제통합 분야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경쟁적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로 표현하고 있다.³⁾

2003년 한·일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협상 개시 1년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국간 FTA 협상은 추진되지 못했다. 그 사이 일본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일본은 새 정부 고위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강도높게 요청했다.

1) ADB FTA Database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동아시아에는 37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고, 41개 협정이 현재 협상 중에 있음. 자세한 사항은 Kawai and Wigraraja(2007) 참조.

2) 당시 아세안과의 FTA 추진 제안은 중국의 WTO 가입을 우려했던 아세안을 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위기 직후부터 중국정부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참여를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중국의 통상관계자와의 2001년 면담내용).

3) 경쟁적 지역주의 개념은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Fred Bergsten의 '경쟁적 무역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과 비슷하지만, 지역주의 형성의 경쟁으로 확대된 것임. 경쟁적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De Lombaerde(2007) 참조.

그 결과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 실무자급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조만간에 공식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추측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미 2004년 한·일 양국간 협상이 타결실패를 경험했고, 양국간 관계로 볼 때 협상 재개는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비록 일본이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전반적인 협상 여건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FTA 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양국간 FTA 협상 개시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04년 한·일 FTA 협상이 결렬된 배경을 고찰하고, 최근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동아시아 FTA 논의 전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한·일 FTA 협상 쟁점과 협상 중단 배경

1998년 이후 한·일 FTA에 대한 논의가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비즈니스포럼 등으로 발전하면서 양국간 FTA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FTA 추진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약화되지 않고 있었다.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가 FTA 체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본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란 점 등 경제적 요인이 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로 한·일의 국민들은 화해 및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그동안 쌓인 불신의 양금을 씻고 긴밀한 정치경제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되었던 한·일 FTA 협상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조업 경쟁력으로 인해 FTA 체결에 따른 부담이 작은 일본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을 설득하여 FTA 협상 개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FTA 협상 연내 개시를 선언하였다.

2003년 한·일 FTA 협상 개시는 한국 국내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어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는 달리, 2003년 하반기에도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는 시기적조로나 국내 정치·경제적으로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대적으로 한·일 FTA 협상 개시를 한국측에 요청하였다. 한편, 공동연구, 업계간 한일 FTA비즈니스포럼,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산관학 연구 등을 통해 협상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어서 FTA 논의를 협상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렸다.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에서도 일본측은 한·일 FTA 협상 개시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4개월 후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개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당시 대기업 총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한·일 FTA 협상 개시 및 조기 타결을 정부에 주문하였다. 주로 일본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에서도 한·일 FTA 지지 표명이 많았다. 이들 대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

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본산 부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산 부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한·일 FTA 추진에 반대하였다. 최근에도 전경련이 한·일 FTA 추진을 제안한 바 있으나,⁴⁾ 대한상의 등 중소기업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⁵⁾

실제 협상에서 한·일 양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분야도 있었으나, 다수 분야에서는 양국간 입장이 유사하였다. 정부조달, 지적권, 전자무역, 경쟁정책, 정보통신분야, 원산지기준 등에서는 한·일 양국은 유사한 입장을 보인 반면,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촉진, 자격증상호인정, 과학기술협력, 무역투자협력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입장 차이는 다른 FTA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며, 협상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가가 협상 타결에 중요하다.

<표 1> 한·일 FTA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

	한국측 입장	일본측 입장
관세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경쟁력 및 관세율 차이를 감안한 차등적 관세양허안 작성 - 특히 부품소재산업 등 민간제조업종에 대한 증장기 관세철폐 및 예외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에게 유리한 제조업 전면 개방 - 하지만, 농수산업에 대한 보수적 개방
비관세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수량제한, 기술장벽, SPS 등 정부조치 및 민간분야 상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상관행과 같이 문화적, 관행적 요소와 같은 비정부조치는 FTA 논의의외
투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상의 불균형 이해 보완 가능한 투자확대 촉진 방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 결정은 FTA 사항 아님 - 한국의 노동환경 개선
과학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연구기금 조성, 고가 기자재 공동사용 등의 협력사업 추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사업 논의 부정적
무역투자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중소기업간 무역투자협력사업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 공동기금 설치 등)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은 FTA 논의 사항 아님
서비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자격증의 인정 - 항공자유화를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과 항공자유화 논의 소극적 입장

주 : 한·일 FTA관련 언론보도(연합통신, 매일경제신문 등)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4)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이 대표적인 한·일 FTA 지지론자이며, 제10대 한·일경제협회 회장에 재선임(2008.2.26) 인사말에서도 한·일 FTA 연내 추진을 제안했음.

5) 주로 중소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007년 11월 11일 발표한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대상으로 64.3%가 중국을 꼽았고, 한·일 FTA는 '불리'하다는 응답(55.5%)이 더 많았음. 조사대상 FTA중 한·일 FTA만은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동 조사는 수도권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양국간에 입장차이가 컸던 분야의 대부분은 주로 무역자유화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이 ‘원-원’ FTA를 위해 제안했던 협력사업들이다. 한국의 협상 실무자들은 제조업분야의 손실을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일본측은 정부개입보다는 민간기업들간 협력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비록 몇 년간 한·일 FTA 논의를 해 왔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FTA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효과에 있어서도 관세철폐와 같은 무역자유화로 한국은 그다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었다.⁶⁾ 다만, 일본이 대한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할 경우 동태적 이익이 대일본 관세철폐에 따른 손실을 능가할 것이란 점이 강조되었다. 경제협력은 크게 민간부문의 협력과 정부 및 공공부문이 관여하는 공식협력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협력을 전제로 한국측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3년 12월 시작된 한·일 FTA 협상에서 한국이 관심을 가졌던 몇 개 분야는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 및 관세구조에서 불리한 한국측은 FTA 체결의 이익을 양국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에 반영시키고자 했으나, 무역 자유화 중심 FTA 내용(contents)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기 어려웠다. 특히 한·일간 경제협력 강화는 더 이상은 협상 주제가 될 수 없고, 무역개방 범위에 있어서도 일본이 ‘사실상’ 농업제외 입장을 제시하자 한국측은 협상 지속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일 FTA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이중 전국경제인연합회(2004)의 ‘한·일 FTA에 대비한 업종별 전략보고서’가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산업별 영향을 크게 한·일 FTA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 손실우려 산업, 영향이 없는 산업으로 크게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농업과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들은 일본과의 FTA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표 2> 한국 산업에 대한 한·일 FTA의 영향

구분	해당 산업	참고사항
이익예상 산업	섬유, 의류, 피혁, 가공식품, 범용석유화학, 농산물, 수산물	섬유 및 가공식품의 경우, 대일 수입 증가도 가능
손실우려 산업	자동차, 기계류, 정밀화학, 전기전자, 비철금속	수입부품의 경우, 무관세화로 기계산업 경쟁력 향상 가능
중립적인 산업	조선, 철강, 정보통신	양국 모두 무관세 적용 품목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p. 23의 <표 12>에 근거하여 작성함.

한·일 FTA로 한국의 산업 중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섬유, 의류, 가공식품, 범용석유화학, 농산물, 수산물⁷⁾ 등 경공업과 기초산업인데 비해, 손실이 우려되는 산업은 한

6) 한·일 FTA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KIEP(2000), Igawa and Kim(2001), 정인교(2001) 등이 있으며, 한·일 양국이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국은 경제손실을 보게 되나, 기술협력, 비관세장벽 개선조치가 협정에 포함되면 한국도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의 주력 제조업종인 자동차, 기계류, 정밀화학, 전기전자 등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우려 산업들은 산업내무역 활성화로 손실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 주력산업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육성해 온 산업들이고, 이들 산업이 한국 총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일간 산업구조 특성상 FTA 체결 시 한·일 산업의 수직적 경제통합이 가속화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저부가가치업종으로 특화되고, 신성장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어 경제 전체의 동태적 다이내믹스(dynamism)이 약화될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협력을 협정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을 한국은 제안했으나,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2004년 중반 한국내부에서는 협상 중단을 검토하게 되었다.

공동연구단계에서 한국측은 한·일 FTA를 동아시아 FTA 구축 및 경제통합 실현의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함을 일본측에 강조했었고, 시간을 두고 진행될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리드해 나가면서 중국의 부상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일 양국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등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후속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FTA 추진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동아시아 지역의 거대 경제블럭이 지니는 경제 및 정치·외교적 의미를 FTA 홍보에 활용하곤 했다. 또한 모범적인 형태의 한·일 FTA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내 거대 FTA 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란 점도 FTA 협상 개시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논리의 하나이었다.

하지만,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공산품 위주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일본측에 대해 한국의 농업 개방 요구는 관철되기 어려운 이슈이었다. 여기서 한국측을 더욱 곤욕스럽게 한 것은 일본 정부의 경제연계협정(EPA) 구상이었다. 기존 FTA를 넘어 다양한 경제협력 조치를 협정에 반영 시킴으로써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포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농업개방을 최소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기존 FTA 협정은 무역개방 중심이지만, EPA는 다양한 경제협력 조치를 포함하는 차세대 FTA라는 일본측 주장을 협상 기간 내내 한국측은 들어야 했다. 즉, EPA를 주장하면서 한국측이 제안한 협력사업은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협상실무자들은 국익에 부합하는 FTA를 일본과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되었다. 일본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구조 및 구성면에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부족한 반면, 농업분야는 최소한 개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⁸⁾

7) 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남. 즉, 김의 경우, 수입쿼터 확대 및 철폐시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일부 품목(특히 활어)의 대일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8) 아직도 일부 국내 언론인, 학자들은 EPA를 FTA보다 우월한 지역무역협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동아일보(2008.02.28일자) “日 아세안 진출의 날개 ‘경제연대협정’ 주의보” 제목하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을 쏟는 사이 일본은 ‘경제연대협정(EPA)’ 체결로 일본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에 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FTA가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는 것에 비해 EPA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은 물론 투자제도 정비, 경쟁정책의 조화, 지적재산권제도 및 노동력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의 경제협정이다”라고 적고 있음.

종합하면, ‘윈-윈(win-win) FTA’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FTA 협상은 개시되었고, 이를 위한 논의가 협상에서 어렵게 진행되자 일본과의 FTA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약화된다. 여기에다가 독도문제, 교과서 파동 등 정치적 현안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FTA 협상은 정치적 기반마저 상실하게 된다.

Ⅲ. 한국의 FTA 추진실적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등 총 4건의 FTA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미국과는 FTA 협정에 서명한 상태이다. 또한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의 FTA 협상은 2008년 말 사실상 전면 타결되었고, 한국과 EU는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8차 협상에서 관세환급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한 민감한 쟁점을 타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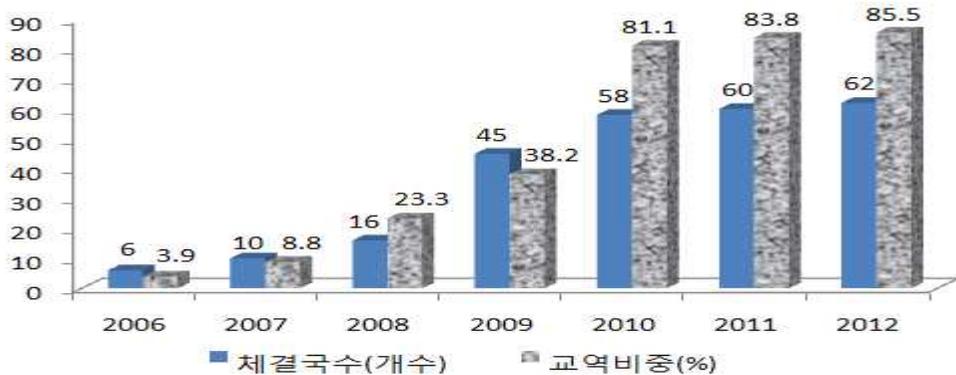
<표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기 체결	협상 중	검토 중
국 가	칠레 ('04.4.1 발효) 싱가포르 ('06.3.2 발효) EFTA ('06.9 발효) ¹⁾ ASEAN ('07.6 발효) 미국 ('07.4 타결, 비준단계)	일 본('03.12, 개시) 캐나다('05. 7, 개시) 멕시코('06. 2 개시) 인 도('06. 3 개시) EU ('07. 5 개시) GCC ³⁾ ('08. 6 협상 개시)	Mercosur ²⁾ (공동연구 종료) 중국(공동연구 중) 러시아, 페루 호주·뉴질랜드

- 주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3) GCC(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한국의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2002년 0.28%에서 2009년 3월 현재 24.4% (미국포함)로 확대되었다. 또한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 증진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WTO 무역통계(무역협회 제공)를 통해 한국의 FTA 체결국인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2006년 교역량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각각 전년대비 56.3%, 20.7%, 35.1%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對(대)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2배 높은 수준이어서 FTA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⁹⁾

9) FTA 활용률을 이용한 분석이 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FTA 대상국에 대한 교역증가율이 對(대)세계 교역증가액보다 높다는 사실을 FTA 경제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자료: 경제화(2008)

<그림 1> FTA 체결국 수 및 교역 비중 추이(전망)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모든 FTA가 체결될 경우 62개국과 FTA를 체결할 것으로 추정되며,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 총교역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FTA를 평가해 보면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이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ASEAN을, EFTA는 EU를, 그리고 칠레의 경우 중남미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다. 즉, 주변국가와의 FTA를 통하여 거대경제권에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각각 추진 순서(sequence)와 정도(extent)로 삼았다. 이와 함께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을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2006-2007년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미국과의 FTA에 앞서 유럽(EU), 중국과의 협정 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2004년 말 중단되었던 한·일 FTA 협상을 먼저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한·미 FTA 추진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이었으나, FTA 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EU, 중국과의 FTA 협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들 지역은 2005년 이후 한국과의 FTA 추진을 제안한 바 있으나, 미국과의 FTA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했던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7년 5월 한국은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였고, 2008년 4월 제8차 협상을 런던에서 개최하였다. 양 지역은 2008년 말까지 협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2009년 중반까지 관세환급 등 잔여 쟁점에 최종합의하고 연말까지 공식서명한다는 계획 하에 협상을 전개해 왔다.

국내 일부에서는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가장 강도 높게 제안했으나, EU, 중국과의 FTA와는 달리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취임 이후 동북아 국가와의 친선 강화를 내세우고,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제안하였지만, 전임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한·일 FTA 협상

을 재개할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즉, 이 당시에는 협상중단의 배경이 되었던 협력사업에 대한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치 환경마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 정부가 평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미국,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한·일 FTA까지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인도 고려되었을 수 있다.

한편, 과거와는 달리 한·일 FTA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관심도 낮아 업계의 대정부 건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일본을 추격하는 형식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의 기업들은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보이면서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지난 50년간 한·일 기업간 교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과 부품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략적 제휴, 투자가 늘어나고, 삼성 등 일부 기업의 국제적 부상으로 일본 기업들과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일 FTA 협의과정(1999-2003)에서 양국의 고위 기업인들은 한·일경제인회의 등을 통해 한·일 FTA 추진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여기서 한·일경제인회의의 한국측 간사는 전경련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경련 내에서 대외통상 업무를 총괄하던 경영인이 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겸 전경련 회장이었고, 조 회장의 사업의 다수가 일본과 관련된 것이 많아 한·일 FTA 추진에 대한 전경련의 지지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보였다. 자동차 등 반대하는 업종의 대기업도 있었지만, 실제 협상개시 전까지 한·일 FTA 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보다는 협상개시 요청 입장만이 주로 정부측에 전달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은 일본은 논의초기부터 한·일 FTA 추진을 주장했고, 양국 기업들이 만나는 회의마다 FTA 공식협상 개시를 정부측에 요청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더구나 기업 혹은 업계를 대표하는 회장급 경영진들이 한·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FTA 논의단계에서는 효성그룹과 같이 일본과의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들이 주로 한·일간 기업인 회의에 많이 참여하였고, 양국간 협의채널(산관학공동연구회, 비즈니스포럼 등)에서도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참여함으로써 FTA 협상 개시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자 우리나라 피해기업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였고,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점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협상 개시 후 기업 내 국내 영업실무자가 많이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일본기업의 국내 내수시장 침투를 우려하는 입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일 FTA 협의과정에서 일본 학자들은 대한국 투자확대 및 기술협력을 간혹 언급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은 비록 국내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점유가 일부 증가되더라도 투자확대와 기술협력 증진으로 양국간 경제이익을 균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실제 협상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정부는 투자와 기술협력은 기업들의 결정사항이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 고위인사가 멕시코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를 요청했고, 이를 활용하여 멕시코와의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제조업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를 주장한 반면, 자국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관세철폐율 59%)를 제안한 사실이 국내 기업들에게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일본과의 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정부는 김에 대한 쿼터 축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김 쿼터 정책을 WTO 위반으로 제소하기에 이르게 되자 양측 통상관계자간 갈등은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협상 중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협상 1년 만에 협상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2004년 11월 한·일 FTA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일본 정부관계자와 기업들은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 재계회의 등에서 우리 기업들도 일본기업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 실무자들을 움직일 정도로 강한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일본과의 FTA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EU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중국과의 공식협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국가와의 FTA에 대해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일본정부는 한·일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2003-2004년 협상에서 입장차이가 컸던 시장개방의 이익을 균형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 EU와의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타결국면에 놓여 있고,¹⁰⁾ 향후 협정 이행시 상당수준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일본과의 FTA 필요 논거로 정부가 강조했던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한 경제이익 실현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¹¹⁾

IV.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최근 입장

일본은 한·일 FTA 협상 재개를 한국측에 요청하고 있지만, 양국간 협상이 단기간 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한·미 FTA 타결을 전후하여 일본 정부의 협상 재개 요청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EU, 중국 등과의 FTA를 추진할

10) 참고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이후 국내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한·미 FTA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오바마와 민주당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도 '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청사진'이란 정책 제안서에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한·EU FTA는 2009년 초 타결하기로 실무자간 합의한 바 있음(동아일보 2008년 11월 18일자. "韓·유럽연합 FTA 협상, 타결목표 내년초로 연기").

11) 2003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일본 국민방문서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한·일 FTA 체결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가물치유용론'과 '준마(駿馬)론'을 제시하였음. 국제무대에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이 점차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마냥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한·일 FTA체결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며 "한국민은 위기에 강하고, 그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한 바 있음. 한국경제신문 "盧대통령의 '가물치'·준마論" (2003년 6월 9일자) 참조.

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1월 한·일 FTA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일본측은 수차례 협상 재개 의사를 한국측에 전달했지만, 한국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협상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한·일 재계도 양국간 FTA 추진을 촉구해왔다. 2006년 5월 25-26일 일본 삿포로시(札幌市)에서 개최된 제3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한·일 FTA 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동 회의는 '21세기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한·일 역할'이란 주제로 △한·일 FTA 체결과 21세기의 한·일관계 △한·일 양국 공통과제와 협력방안 △상호 이해증진 및 문화·인적교류 방안에 대해 양국 경제계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인 2007년 4월 12~13일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부상과 한·일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일 경제인들은 일본의 과도한 농업보호가 양국간 FTA 체결에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하고, 이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추진해 나아가 함에 입장을 같이 하였다.

한·미 FTA 타결 직후 아사히신문, 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각각 "한·미FTA, 다음은 일본 차례," "한·미FTA 타결, 한·일도 하면 된다" 제하의 2007년 4월 3일자 사설을 통해 한·미 FTA는 "일본에 큰 교훈이 되고 있으며, 한·일경제협정 교섭을 조기 재개해야" 함을 지적하고, "내향적인 일본 통상정책이 흔들리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통합교섭에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보았고, 닛케이는 "한·미 쌍방이 여러 난국을 극복하고 합의에 성공한 사실은 일본에 큰 교훈을 준다"며 한·일경제대협정(EPA) 교섭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국정브리핑 2007-04-03). 요미우리 신문은 4월 4일 사설에서 무역자유화의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일본도 통상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급무임을 지적하고 있다(讀賣新聞 2007-04-04). 또한 국내 언론들도 일본 통상당국자들이 한·미 FTA 타결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중견 간부는 4일 "한국의 역동성이 무서울 따름이다. 협상 시작 10개월 만에 타결 짓는 속전속결을 일본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로 경제기적을 이뤄낸 30~40년 전 한국을 연상 시킨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간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세계일보 2007-04-05).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일 FTA 추진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한·미 FTA 타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한·미 FTA 그 자체보다는 한·미 FTA 이후 탄력을 받게 될 한·EU FTA, 한·중 FTA를 더 우려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주로 한국에 수출하는 중간부품과 기계설비는 유럽산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다. 또한 한·일 FTA 협상타결 실패 이후 한·일 FTA 추진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한·중 FTA가 추진되면 일본으로서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중국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 FTA 타결을 전후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혔다. "언제든 한국과 FTA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4월 3일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는 발언이 단적인 예다(한국일보 2007-04-07).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일

FTA는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 재개 의사를 비쳤지만, 한국은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4월 4일 “일본이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한 뒤, “농산물에 대해 90% 이상의 개방 제안을 안하면 협상은 재개될 수 없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2007-04-09). 2008년 6월과 12월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회가 각각 동경 및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 다만, 2008년 11월 7일 한나라당 경제정책포럼 조찬강연에서 당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국, EU, 인도 등과의 FTA 체결(이행) 이후 일본과의 FTA도 검토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유사한 언급이 한·일 양국 고위관계자간에 이루어졌으나, 양국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합의하거나 특별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단기간 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V.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한·일 FTA

한·일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다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선(이익)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한·일 FTA의 역할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다. 국내 연구로는 김세원 외(2006), 최영종 외(2005), 김태현(2007), 최세균(2008) 등이 있다. 최세균의 연구는 동아시아 FTA 추진 시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양자간 FTA가 예정과 같이 추진되면 농업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 FTA의 경제효과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Ahn and Cheong (2007), Kawai and Wignaraja(2007), Urata(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양자간 FTA보다는 지역차원의 FTA가 더 큰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이 동아시아 FTA 체결로 2-4%대의 높은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개별 국가간 무역투자의 확대에 의한 시장통합과 더불어 금융협력 논의도 진행중에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제도적 경제통합 논의도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1년(브루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채택했는데,¹²⁾ 동 보고서는 유럽과 같이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장기목표로, 동아시아 FTA(EAFTA)를 중간단계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04년 비엔티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FTA 전문가그룹의 2년간 한시적 운영 및 연구를 제안하였고, 2007년 1월 세부 아세안+3 정상회의는 이 연구그룹의 최종보고서를 지지하고, 채택하였다. 비록 민간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이었지만, 이 연구그룹 활동과정에서 중국

12) EAVG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공식 결정된 연구그룹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과 일본은 EAFTA 추진 구도에 대해 경쟁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이슈는 동아시아 FTA의 지역적 범위이었다. 즉, 중국은 기존 아세안+3 체제를 선호하는데 비해, 일본은 아세안+3+3(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제안하였다.¹³⁾ 한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들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본의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카르타에 동아시아연구기구(ERIA)를 설치하여 아세안+3+3 FTA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은 소수의 주도 국가들이 이끌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및 추진으로 지역경제통합 역량을 확충한 상태이나,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동아시아 FTA 논의를 주도해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많다. 동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크면서 경제제도가 유사한 한·일이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단계별로 이행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역시 한·일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일 협상이 시작된 2003년 일본 통상백서는 FTA 체결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일본 정부는 FTA 전략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비즈니스권”을 주도적으로 창설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교섭을 적극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체와 중국, 대만, 홍콩으로 협상대상국을 확대해 나아가 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일 FTA는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의 핵심부분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도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중장기 경제통합 방향에 대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없었다. 오히려 지난 몇년 동안 개최된 각종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 같은 입장보다는 서로 반목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양국간 경제협력 논의도 정권에 따라 상당한 굴곡을 보였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정상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동반자관계 공동선언’과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시기가 가장 긴밀한 한·일관계를 형성했으나, 이후 과거사, 독도, 교과서 등의 분쟁이 제기되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되었다.¹⁴⁾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및 경제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EU 시장의 성장력이 과거보다 부진해짐에 따라 동아시아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역외수출지향성을 줄이고, 역내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아시아 협력에 공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정치경

13) 흔히 아세안+6로 불림.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상백서(2007) 및 Kawai-Wigraraja (2007)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동아시아지역과의 무역비중이 높고, 산업·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FTA 경제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과, ‘열린 동아시아 경제권’ 창출을 위해서는 아세안+6 체제가 아세안+3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임.

14) “日 언론 한국관련 보도 분석해 보니”에 따르면, 일본 언론의 대한민국 보도 경향도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 관련 보도에서 ‘김대중·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정권’ 당시 가장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던 반면, ‘노무현·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 들어 부정적 시각이 특히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세계일보 2008-4-1).

제적 위상이 급속하게 제고되고 있고, 동남아 국가 경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FTA 등과 같은 역내 경제통합 추진여건이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한국이 세계 외환보유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물부문 통합에 이어 금융통합까지 달성할 경우 금융위기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일 FTA를 양국간 협상에 한정해서 검토하기 보다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950-60년대 유럽통합의 과정을 보더라도 통합의 중요한 계기마다 ‘평화’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목표실현을 강조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한 바 있다. 특히 한·일간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제논리만으로는 양국간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공동목표 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양국은 ‘진정한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한 정치·외교적 신뢰수준이 제고시켜야 하며, 양국이 모색하는 FTA 내용도 동아시아 FTA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한·일 FTA의 순기능에 대한 평가도 양국간 FTA 협상재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일 FTA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효과는 정인교(2002)에 제시되어 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이경태(2008), 송원근(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경태(2008, 23)는 “세계 최강의 제조업대국인 일본은 우리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국내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본과 안마당에서 한판 승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FTA 체결 시 수입확대의 여지는 크지만, 한국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중점협상분야를 분명히 설정하고 양보할 분야와 연계하는 협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송원근(2009)은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자세 전환 촉구와 더불어 중국과의 FTA를 감안해 민감성이 반영된 농업개방안 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일 무역역조 확대 가능성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부품·소재산업 기술협력 및 투자확대,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전제로 협상을 재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경제권에의 시장접근 개선, 경제효율성의 증대, 경제구조고도화라는 한·일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송원근은 강조하고 있다.

VI. 향후 한·일 FTA 협상 전망

농업문제가 한·일 FTA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실무자들이 한·일 FTA의 경제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산 부품소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컸다.¹⁵⁾ 한·미 FTA와는 달리 FTA를 체결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수출증대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일본

15)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2008)에 따르면, 2007년 한·일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부품소재분야 적자가 194억달러이었으며, 전체 대일역조의 62.5%를 차지하고 있음.

으로서의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2008년 2월말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2004년 이후 논의되어 온 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동연구-산관학 수순을 밟아 온 한·중 FTA의 협상 개시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해야 한다. 2005년 중순부터 중국은 협상개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2007년 한국은 산관학공동연구회 설치 제안으로 중국측 요청을 우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한·중 FTA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난 3년간 단계별로 추진되어 온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중 정상은 2008년 5월 27일 북경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추진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한중 보다는 한·일 FTA가 먼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다.¹⁶⁾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추측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발표된 '신아시아 구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및 중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 2008년 초부터 일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방한했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는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수차례의 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2008년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4월 중순 방일 정상회담 등 6차례 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미 1차 정상회의에서 일본측이 한·일 FTA를 거론하였고, 4월 2차 정상회의에서 실무자간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한·일 정상의 합의에 의해 2008년 6월 실무자급 협의가 개최되었으나 기존 입장을 확인한 채 협상 재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 측은 농업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집권 자민당 내 핵심 세력인 이른바 '농수산족'(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현재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농업정책을 변경하기 어렵고, 일본은 FTA 정책은 현재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가 어렵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농수산족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가차원의 통상정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EU FTA가 타결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본 내에서는 FTA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농업개방에 대한 기존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5년의 시차가 있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2003년 한·일 FTA 협상 개시가 결정된 시점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고, 일본은 한국 신정부 고위층에게 한·일 FTA 협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의가 연쇄적으로 개최되는 점도 유사하다. 2003년 2-3개월마다 개최되었던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한·일 FTA 협상을 의제로 내걸었고, 연초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검토 수준에서 논의했으나, 같은 해 연말에는 협상 개시로 발전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재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으로 정했다. 2007년 대선 이후와 새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상반기 동아시아국가와의 협력강화를 강조해온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의 새 정부 고위급 인사에게 협상 재개를 적극 요청했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가 퇴임하고, 후임으로 극우파

16) 이에 대해서는 송원근 (2009) 참조.

로 알려진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취임함으로써 한·일 FTA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양국은 금융분야 협력을 위해 정상회담이 빈번하게 개최됨으로써 한·일 FTA 협상도 논의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향후 양국간 정상회담에 한·일 FTA도 공식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2004년 협상이 중단될 당시와 비교하여 한·일 FTA 추진에 대한 일본 내 여건은 그다지 개선된 것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향후에는 일본도 기존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일본측이 체결한 FTA 양허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분적으로 농업개방을 확대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추진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수준 높은 FTA에 서명했고, 유럽(EU)과도 협상타결 국면에 와 있어 이들 선진거대경제권과의 FTA가 한·일 FTA보다 먼저 이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FTA 이후 추진될 한·일 FTA로 인한 부작용은 2003-2004년 당시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한국이 무역 면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한·일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양국 산업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시킴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손실은 확실하게 노출되는데 비해, 이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명백한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에서는 협상 재개를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나마 정부간 사전협의를 없이는 우리나라의 통상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양국간 FTA 이익의 균형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협력방안 제시를 전제조건으로 협상개시 논의에 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⁷⁾ 오늘날 체결되는 FTA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입장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일본측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에서와 같이 산업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협력사업 요구를 해외공적원조(ODA) 성격의 지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윈-윈 FTA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수용해야 한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협상담당자들이 윈-윈 FTA 도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면 결국 협상을 타결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003-2004년 한·일 FTA 협상 중단 경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책담당자들이 경제적 실익을 확신하지 않으면 FTA를 추진하기 어렵다. 더구나 2004년 협상중단을 직접 경험했던 실무자들이 현재 FTA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 상태에서 일본과의 협상재개 요청을 수용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미국이 한국의 한·미 FTA 협상 개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심사항인 스크린쿼터를 자발적으로 축소하고, 자동차배기가스기준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미국 통상당국이 우리나라와의

17) 2008년 2월 28일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은 “한·일 FTA 협상 재기는 농산물 개방과 비관세 장벽 개선,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일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일 FTA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논의 수준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협상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정부는 협상개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고이즈미 정부 시절의 냉각된 한·일 관계가 이명박-아소 다로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화됨으로써 정치적 환경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양국간 분위기를 양국간 FTA 협상 재개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인식 공유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중장기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어 한·일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서 양국간 FTA는 단지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간 FTA 협상개시는 많은 부분 일본의 입장과 자세에 달려있으며, 일본이 어느 정도 개선된 안을 제시할 경우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정홍보처(2008). “능동적 세계화, 한·미 FTA.” 『참여정부 경제 5년』. 서울: 한스미디어.
- 김세원 외(2006).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제도적 접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태현(2007). 『ASEAN의 경험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원근(2009). “한·중 FTA 및 한·일 FTA 추진 가능성 평가.” 바른FTA본부 및 무역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2009년 우리나라 FTA 통상정책 방향 모색』. 발제자료, 3월 17일.
- 이경태(2008).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과 한국의 FTA정책 기조.” 한국국제경제학회 창립 31주년 기념 하계 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6월 13일.
- 이해영·정인교(2008). 『한·미 FTA, 하나의 협정 두 개의 진실』. 서울: 시대의 창.
-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FTA에 대한 주요 제조업의 입장과 FTA 추진 우선순위.” 『FTA와 산업』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정인교·조정란(2007). “한국의 FTA 정책 고찰 및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일협력위원회 발표자료(동경, 2월).
- _____(2008). “한·일 FTA 협상 재개 될 수 있나?”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 정인교(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2008). “한·미 FTA의 주요 이슈 및 파급영향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제14권. 2호, pp. 213-270.

- 정재화(2008). “우리나라 FTA정책 실적 평가.” 바른FTA본부 주최 FTA세미나(한·미 FTA 비준 촉구 및 신정부의 FTA 정책 방향). 2월 4일 전경련 3층 제1회의실.
- 조정란(2006). “일본의 FTA정책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성린(편). 『한·미 FTA 대한민국 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동행.
- 최세균(2008).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분야 대비』.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12월 발간 예정.
- 최영중 외(2005).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2008). “Tech Column.” 『부품·소재』. 통권 23호. 1월.
- Ahn, Choongyong and Inkyo Cheong(2007). “A Search for Closer Economic Relations in East Asia.”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SSCI Journal*. Co-authored. Vol. 58. No. 2, pp. 173-190.
- Bergsten, C. Fred Bergsten(1996). “Globalizing Free Trade: The Ascent of Regionalism.” *Foreign Affairs*. May/June.
- De Lombaerde, Philippe(ed)(2007). “Asia-Pacific Regionalism Quo Vadis? Charting the Territory for New Integration Routes.” *Multilateralism, Regionalism and Bilateralism in Trade and Investment: 2006 World Report on Regional Integration*. Netherlands: Springer Verlag. August.
- Igawa, Kazuhiro and Bonggil Kim(2001). “A Note on Possibilities about Japan-Korea Free Trade Area: A Theoretical and Strategic Approach.” Kobe: Kobe University.
- Kawai, Masahiro and Ganeshan Wigraraja(2007). “ASEAN+3 or ASEAN+6: Which Way Forward?” Presented at the WTO-HEI conference on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Geneva (10-12 Sept)
- KIEP(2000). “Toward a Korea-Japan FTA: Assessment and Prospects.”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seminar *Towards Closer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Proposal for Formulating a 21st Century Partnership*. Seoul: Shilla Hotel.
- Kuno, A. and F. Kimura.(2008). “Northeast Asia and FTAs: Issues and Perspectives.” Presented at 2008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conomic Development*. Niigata: ERINA (22 January).
- Urata, Shujiro(2008).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esented at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Economic Association “Leap-off Strategy for Global Korea.” Seoul. (12-13 August).
- 鄭仁教·趙貞蘭(2007). “韓·日FTAは可能なのか—韓のFTA政策の考察及び韓·日FTA交にする示唆—.” 『ERINA REPORT』. Vol. 76.
- 中島朋義(2005). “日韓自由貿易協定の効果分析”. 環日本海研究所(編). 『現代韓國—進化するパラダイム』. 日本評論社.
- 經濟産業省(2003). 『通商白書 2003』.

_____ (2007). 『通商白書 2007』.

讀賣新聞(2007). 『日本も積極策に轉じる時だ』. 4月 4日.

[인터넷 자료]

한국경제신문(2003년 6월 9일). “盧대통령의 ‘가물치’준마論”. <http://www.hankyung.com>

국정브리핑(2007년 4월 3일). “세계 언론 ‘FTA로 한·미 새로운 시대 열어.’”

<http://www.korea.kr/newsWeb/>

동아일보(2008년 2월 27일). “日 아세안 진출의 날개 ‘경제연대협정’ 주의보.”

<http://www.donga.com>

머니투데이(2007년 4월 9일). “일본 총리·장관도 ‘한국과 FTA 재협상’ 의지.”

<http://news.moneytoday.co.kr>

세계일보(2007년 4월 5일). “[세계프리즘] 한·미 FTA 타결에 日 ‘곤혹.’”

<http://www.segye.com>

(2008년 4월 5일). “日언론 한국관련 보도 분석해 보니.” <http://www.segye.com>

한국일보(2007년 4월 7일). “한·미 FTA, 일본도 적극책으로 돌 때다.”

<http://news.hankooki.com>

Abstract>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 for a Korea-Japan FTA and prospects for the FTA

Inkyo Cheong* · Jungran Cho**

The official negotiation for a Japan and Korea FTA began at the end of 2003, without substantial confidence for mutual gains from the conclusion of the FTA. As the differences of positions about major issues in the bilateral FTA negotiation were rather enlarged more under the negotiation period of 2003-2004, the negotiation was finally suspended at the end of 2004. Moreover, polit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worsened due to then-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s paying homage to Japanese shrine, in addition to territory issue about the Dokdo Island and the textbook with distorted interpretation on history.

While Japan has been active in requesting Korea for resuming the negotiation for a Japan-Korea FTA after President Lee, Myong-Bak took office February 2008, Japan does not seem to be enthusiastic in devising the contents for balancing economic gains from the bilateral FTA. Still, the government of Korea is not sure for economic gains from structural adjustment with the FTA. However, Korea signed the FTA with US in April 2007 and is under final stage for conclusion for an FTA with EU, and Korean industries will be under structural adjustment in a few years, implying that economic gains/losses from structural adjustment under an FTA with Japan should be reassessed.

In general, it can be summarized that political environment for a Korea-Japan FTA is improved now than past. However, unless Korea become confident about inducing 'a win-win FTA' with Japan, Korea should not resume official negotiation for a FTA with Japan. Also Japan should pay more attention for preparing menus for making a mutually beneficial FTA, rather than pushing the resumption of the negotiation. Otherwise, simple resumption of negotiation will entail another failure in the road of a Japan-Korea FTA.

■ 논문접수일 : 2009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9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15일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Inha University

** Research Fellow, Jungseok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Inha University